

1000억 지원 ‘글로벌大’ 속도… 찬반투표 거부 등 ‘이견’

부산대·부산교대, 구성원 반발 극심
충남대·한밭대, 강원대·강릉원주대
반대 현수막·천막시위 등 벌어

5년간 대학 당 최대 1000억원을 지원 하는 글로벌대학 사업 선정을 앞두고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 하려는 대학에 내홍이 일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글로벌 사업을 발표하면서 ‘대학 간 통합’을 통한 캠퍼스 자원 공유, ‘유사 학과 통합’ 등을 혁신 사례로 제시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글로벌 사업에 공동지원하기 위해 통합을 논의 중인 대학과 교내 구성원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부산교대가 부산대와 통합을 전제로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 글로벌대학 사업 참여 찬반 투표에 부산교대 학부생 98%이 투표 보이콧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학부생 전체 1453명 중 투표 인원은 단 33명. 교수와 직원, 학생 등 총 인원 2202명 중에는 315명이 참여해 181명이 이를 찬성했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이를 반대한 셈이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 ‘글로벌대학 사업’ 참여를 추진하자, 부산교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줄속 추진 글로벌 사업에 반대한다’며 11일 오전 11시 30분 부산교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교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다.

부산교대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며 반발한다. 부산교대가 부산교대에 대학 통합을 제안하고 6일 후인 지난 9일 부산교대 측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튿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투표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인성 부산교대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진행된

글로벌대학 설명회에서 학생들이 글로벌대학과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총장, 기획처장, 교수협의회장 모두 다른 대답을 하는 등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대학본부조차 합의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업 선정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현장에서 학생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교대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

는 15일 대학 평의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뒤 17일 교수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계기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이다. 사업 선정 대학은 5년 간 최대 국고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총 3조 규모다. 대학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나 미래 교육에 걸맞은 연구·교육의 전환 등을 추진하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달 말 해당 사업의 예비 지정 신청을 앞두고 부산교대가 부산교대 측에 ‘두 대학이 통폐합하고 글로벌 사업에 공동 지원하자’고 제안하면서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이다.

이번 사업과 함께 대학 통합을 논의하는 대학은 부산대-부산교대 뿐 아니라 ▲충남대·한밭대 ▲강원대·강릉원주대 ▲금오공대·경북도립대·안동대 ▲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 등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와 한밭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충남대 교수회도 지난달 캠퍼스 내 “말년 총장의 ‘묻지마 통합’,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 성급한 통합이 감당 못할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3차례 입장문을 냈다. 아울러 충남대 총학생회는 같은 시기 “학생 동의 없는 ‘통합 기반’ 혁신을 전면 철회하라”며 1주일간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다.

한밭대 교수회도 “글로벌 대학 공모를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강원대도 강릉원주대와 ‘1도 1국립대’ 모델 구축을 목표로 양 대학 통합을 논의하면서 지난달부터 1개월여동안 25여차례에 걸쳐 총장과 단과대학별 간담회를 열었지만 구성원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대학 구성원 의견을 모아 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충남대와 한밭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간 통합은 단순히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좋은 대학을 만드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두 대학이 지혜를 모아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다 쓴 마스크로 ‘플라스틱 제품’ 만든다

숙명여자대학교, ESG 실천
교내 주요 건물 7곳 수거함 설치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장윤금)가 ESG 실천을 위한 ‘2023 페마스크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숙명여대는 10일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등 교내 주요 건물 7곳에 페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봉사단 SEM 학생들과 함께 교내 구성원이 사용한 페마스크를 수거해 여러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페마스크를 재활용하려면 비치된 가위로 마스크 코핀을 제거한 뒤 각각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페마스크 업사이클링에 참여하면 새 마스크도 받을 수 있다.

페마스크 수거함은 숙명여대 산업디자인과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새로 디자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가 사용 후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가운데)이 10일 오전 학생회관 앞에 설치된 페마스크 수거함을 이용하고 있다. /숙명여대 제공

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용 마스크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면, 분해까지 수백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회용마스크는 주로 폴리프로필렌(PP) 소재로 이뤄져 있어 수거 후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친환경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고, 영원무역홀딩스 이월

상품으로 ‘업사이클링 패션쇼’를 진행하는 등 ESG 실천에 앞장서왔다.

장윤금 총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캠퍼스에서 마스크가 많이 사용되는데, 페마스크 수거함이 없어 재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대학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ESG 대표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올 여름 한강서 ‘수상 스포츠’ 즐기기

‘스포츠 팔레트 in 한강’ 행사 개최

서울시는 한강 곳곳에서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스포츠 팔레트 in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7월 1~2일에는 반포한강공원(테리마리나)에서 국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3 서울특별시장배 요트대회’가, 8월 24~27일에는 잠실 한강공원(모래일광욕장)에서 14개국, 100여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3 서울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린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상·수변 스포츠 교실’도 운영된다. 올여름 한강공원에서는 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뿐만 아니라 컬링과 볼링이 결합된 ‘플로어컬’, 탁구와 배트민턴이 혼합된 ‘핸들러’ 등의 이색 스포츠를 배울 수



한강몽땅 종아배 경주대회 참가자 모습. /서울시

있다.

이외에 ▲가장 빠르고 별난 배를 만들어 보는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 ▲일몰과 야경을 배경으로 하는 ‘레인보우브릿지 요트투어’ ▲수변 경관을 즐기는 ‘한강 킥카누 물길여행’ ▲안전한 자전거 도로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 ‘슬로우 자전거 대회’가 마련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 등 설치

건축사 532명 투입 전수 조사 실시

서울시는 이달 중 관내 반지하 주택 약 22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내달 말까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건축사 532명을 투입해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뒤 침수 예방시설이 필요한 곳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입주와 보증금, 이주

비 등을 지원한다.

주거상향대상은 반지하·고시원·비닐하우스 같은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며, 민간 임대주택 이주 시에도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용자가 가능하다.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와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스마트 축사시설 보급 207억 투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62억 원 등 총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장비를 보급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한다.

앞서 도는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69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 등 14개 시군 91개 농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20개 농가 ▲낙농 40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11

개 농가 ▲육우 1개 농가 ▲육용오리 1농가다.

다른 시도의 경우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따라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하고 있지만, 도는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력했다.

선정된 91개 농가는 축종별 사육두수를 고려해 농가 1곳당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축산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축사’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